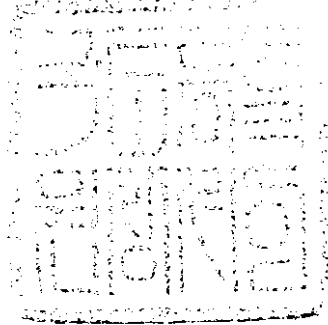


이 報告書를 國土統一院 74年度
研究用役의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11.



研究責任者：金 鎬 宅

차 례

서 언	3
제 1 장 북한의 생산정책	5
제 2 장 부분별 생산후세비교	16
제 3 장 생산과 소비	33
제 4 장 1970년대말 까지의 생산량의 비교와 우열	54



서 언

1960 년대의 국제정세는 동서냉전의 완화에 따르는 평화공존무드
의 조성과 국제정치의 다원화, 지역적 경제협력체제의 확립과 EEC
를 중심으로 한 서구경제의 지위향상, 중소분쟁의 격화와 국제공산
주의 운동의 분열등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1970 년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국제정세는 별로 크게 변치
않는 가운데 동서간의 경쟁적 공존이 지속될 것이 확실하나 한반
도와 대만 및 인도를 둘러싼 아세아 정세는 중공의 핵보유와 일
본 경제의 거대화 및 미소중일의 아세아정책의 변화로 크게 변모
할 가능성이 짙다.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은 우리 자신의 실력배양과 국제정세의 유
리한 전환이 자의 양분과 같이 잘 배합되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 조건의 형성과 객관적 조건의 성숙이 일체될 시
기로서 70년대말 또는 80년대초를 드는 학자들이 많다.

그런데 경쟁적 공존의 세계에 있어서 승패를 가름하는 것은 경
제발전의 수준과 앞으로의 발전속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경제력의 현 수준과 잠재력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현시점에 있어서의 남북한의 국민총생산과 국토통일의 기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1970년대말까지의 남북한의 국민총생산과 1인당 GNP를 주계 비교하므로서 70년대말의 남북한 경제력의 격차를 밝히는 것이다.

제1장 북한의 생산정책

한 나라의 경제력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력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두 나라의 경제력 수준을 비교하려면 생산력 수준을 비교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력 수준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리적 단위로 표시한 몇가지 중요물자의 생산량을 직접 비교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조강생산에 있어서 1957년의 미국의 생산량은 1억 200만톤인데 대하여 소련의 생산량은 5,100만톤으로서 소련의 대미 비율은 꼭 50% 있으나 1966년에는 1억 2,650만톤 대 9,690만톤으로 되어 소련의 대미 비율은 76.6%로 더있고 원유 생산에 있어서는 1957년대 3억 5,300만톤 대 9,800만톤이었던 것이 1966년에는 4억 917만톤 대 2억 6,512만톤으로 되어 소련의 대미 비율은 28% (57년)로 부터 약 65% (66년)로 높아졌다는 식으로, 그러나 이것은 비교물자의 종류에 따라 양자별 비율이 각각 다르며 또 그 차이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어떠한 물품을 선정하는가에 따라 또 각 품목에 어떠한 가중치를

정하는가에 따라 총생산량의 비율은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또 조강 1톤의 가치는 원유 몇톤에 해당하는가 하는 관측 생산물의 상대가격은 소련과 미국과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단순한 물리적 단위로서의 비교는 각각 그 품목별 비교에 지나지 않으며 두 나라의 경제력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생산력 수준의 비교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일국의 경제성장의 속도를 총체적으로 측정하는데 있어서나 또는 한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을 타국의 그것과 비교하는데 있어서나 가장 널리 이용되는 기본적인 척도는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민소득(NI)이라는 개념이다.

간단히 말해서 국민총생산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서 가년 동안에 생산된 재화 및 용역의 총액(부가가치의 합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국민소득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감가상각비와 간접세는 포함되어 있으나 보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국민총생산으로부터 감가상각비(생산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 도구, 건물등의 소모분)과 간접세를 공제(국민총생산 측정의 기초인 시장가격에는 이미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하고 보조금을 가한 것이다.

또 국민순생산(NNP)이라는 것은 국민총생산으로부터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개념중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국민총생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좌폐의 구매력(즉 물자)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일국의 경제력 수준을 측정하거나 또는 타국의 그것과 비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한 「실질국민총생산」 또는 「실질국민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소양국의 경제력을 비교하는데 있어서나 남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하는데 있어서나 이론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비교치 또는 국민 일인당의 실질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는 국가의 경제가 아니라 미소양국의 경제나 남북한 경제와 같이 경제체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비교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기술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다.

첫째 국민소득의 개념이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간에 각각 다른 점이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경제의 전반적 동향을 나타

타내는 지표로서 또는 한 나라의 경제력 수준이나 성장속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사회 총생산액」과 「국민소득」이라는 두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총생산액은 일정한 기간(예를 들면 1년간)에 물질적 생산부문에서 생산한 물질재화 즉 생산수단과 소비자료의 선량이다」(주1)

따라서 이것은 한 사회의 모든 생산물을 총집계한 것이므로 이중 산출으로 계산된 중복계산분이 포함되어 있다. 서낭죽 개념에 의하면 총생산액(Total Product)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소득은 물질적 생산부문에서 생산된 연연의 총생산으로부터 그것은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물질적 지출을 공제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소득은 연연의 순생산의 규모를 표시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물질적 생산부문이라는 것은

① 공업

② 농업

③ 건설업

주 1) 농맹과학원경제학연구소지

주의보급협회역. 「경제학교과서」

④ 화불 운수 .

⑤ 통신중 생산에 봉사한 부분

⑥ 원료 . 기계의 보급

⑦ 국영상업과 조달

⑧ 공공식당

⑨ 기타 물질적 생산(국민의 부업으로 행하여지는 공업원로의 생산 및 원료의 가공, 수렴, 배품, 수집등)인 것이다」(주2)

그러므로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국민소득이란 사회총생산액에서 원재료, 봉급, 빈부등의 이종계산분(소비분)과 고정자본지설의 감가상각분(소모분)을 공제한 순생산액일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물자와 수송이나 보관과 같이 생산과 직접 관계가 있는 「서비스」업은 국민소득의 구성요소로 포함되나 고유한 의미의 서비스는 국민소득계산에 있어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공무원 및 가사사용인으로 부터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서비스」까지도 국민소득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주 2) 천계서

그러므로 남북한의 경제력 수준을 비교하려면 북괴가 공표(주장)하는 국민소득을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소득 개념으로 다시 계산하거나 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민총생산 개념으로 재평가 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괴의 국민소득을 우리의 국민소득 또는 국민총생산으로 재평가하는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① 북괴가 주장하는 국민소득에 고유한 의미의 「서비스」소득을 가산하고 간접세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공제하므로써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국민소득(NI)으로 접근시키는 방법

② 북괴가 주장하는 국민소득에는 이미 간접세에 해당하는 거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고유한 의미의 「서비스」소득을 가산하므로써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국민순생산(NNP)으로 접근시키는 방법

③ 북괴가 주장하는 국민소득에다 고유한 의미의 「서비스」소득을 가산하고 또 고정자본 시설의 감가상각비를 가산하여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총생산으로 접근시키는 방법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국민순생산 또는 국민소득을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소득개념으로 재평가 조정하여 북한과 비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거의 다 국민총생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필자는 본고에서 편의상 복귀가 주장하는 북한의 국민소득(복귀개념에 의한것)을 자본주의 국가의 개념인 국민총생산으로 재평가하여 한국의 국민총생산과 비교하기로 한다.

기술한 바와 같이 복귀가 주장하는 국민소득에는 고유한 의미의 「서비스」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고정 자본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이미 공제되어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복귀개념의 국민소득에 다 가산하면 국민총생산과 같아진다.

남북한의 산업구조와 공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고정 자본 시설의 감가상각비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고유한 의미의 「서비스」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와 같은 것은 없으나 한국의 국민총생산에서 고유한 의미의 「서비스」소득과 고정 자본시설의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민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구성비
(1965년 불변시장가격으로)

연도	62	63	64	65	66	67	68	평균
구성비	% 7.6	" 7.5	" 7.2	" 7.3	" 7.0	" 7.1	" 6.8	7.2

출처 : 한국은행, 국민소득연보, 1969.P.66. (1~2) 산업별국민총생산(Ⅱ)에서

국민총생산에서 고정자본시설의 값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율
(경상시장가격)

연도	62	63	64	65	66	67	68	평균
비율	5.4	5.4	5.3	5.7	5.6	6.0	6.3	5.6

출처 : 한국은행, 국민소득연보, 1969.P.60. (1~1)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출(1).

상기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GN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8년에 6.8%이고 62~68년의 평균은 7.2%

이나 사회주의 진영내에서도 특히 북괴는 「서비스」부분을 경시하고 소홀히 다루고 있으므로 발달하였을 리가 없다. 2% 가산하더라도 많이 하는 셈일 것이다. 그러나 중공업부분의 시설이 우리 보다는 많으므로 고정 자본시설의 감가상차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 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다. 우리 보다는 약 2% 높여 6%정도 가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결국 두가지 합해서 10% 가량 가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간의 화폐단위는 같으나 그 구매력(화폐가치)에 큰 차이가 있는 점이다.

남북한 화폐의 구매력을 어떻게 평가해서 비교하는가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만일 남북간에 경계 거래가 자유로이 행하여지고 있다면 구매력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두 화폐의 교환비율(환율)이 성립할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오늘날 국민소득의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외환율에 의한 단일통화(비교적 안정되고 국제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세계화폐적인 미국달러)로 환산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방법이다.

북괴와 비교적 거래가 많은 일본(서방법 국가중)은 1965년래

개최된 평양일본 상품전시회에서 북괴「원」과 미국불과의 환율을

1:불대 2원 57전(북괴화폐)으로 잠정합의를 보아 현재까지 이들

그대로 통용하고 있다. 또 영국의 유명한 연감인 「The State-

rmans Year-Book.1968」에도 북괴화의 대미비율(환율)은 1:불

대 2원 57전으로 되어 있다.

북괴의 물가추세는 60년대애 드러서서 약간 상승하고 있다고
하나 미국의 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북괴화의
대외가치율(대미불과환율)이 1:불대 2원 57전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 그대로 적용기로 한다.

그런데 두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인 환율은 원래 두 나라의 모
든 재화 및 용역의 불가관계들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품의 불가관계만을 주로 반영하는 것에 지나
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나라의 불가관계들 완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또 국민소득 내지 국민총생산을 형성하는 각종 생산물은 각국의
기후조건, 관습, 제도적 요인등에 따라 각각 그 긴요도가 다르므로
그것을 일률적으로 자국화폐가 아닌 타국화폐로 환산해 놓고 보면
그 결과는 일국의 후생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생기게 된다.

특히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국가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만은) 모든 상품의 가격을 정치적 이유로서 이던 경제적 이유로서 이던 국가가 공정하거나 또는 이중가격제를 취하는 경우에는 공정환율은 물론이고 자유시장에서 성립하는 환기세도 역시 두 통화의 구매력의 비율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국민총생산을 미분로 환산해서 비교하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개략적이며 대체적인 비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제 2 장 부분별생산주세비교

1970년대말에 이르기까지의 남북한 GNP를 비교하려면 먼저 현재의 남북한 GNP와 앞으로의 성장추세를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는 먼저 북한의 GNP(69년 현재)를 추계하여 한국의 GNP와 비교하는 동시에 북한의 인구를 추정하여 남북한 1인당 GNP를 계산 비교키로 한다.

전장에서 이미 실명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GNP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총생산액」과 「국민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GNP를 비교하려면 먼저 북괴가 주장하는 북한의 국민소득을 전술한 제 3의 방법으로 재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의 GNP에 관해서는 국내외 학자들의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69년 현재의 북한 GNP는 29억달러 내지 3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69년말 현재의 북한인구는 1,370만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인당 GNP는 미화로 환산해서 212달러에 달하였다

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근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분쟁은 아니다. 공산권내정세분석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권위있고 착실한 연구소인 영국전략연구소가 「동서군사력비교」라는 제목으로 해마다 발표하는 일차보고에 의하면 제1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GNP는 1967년에 27억달라, 68년에는 28억달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북한경제의 성장률이 69년에도 68년(영국전략연구소가 추정하고 있는 3.5%전)과 같았다면 29억달라가 되었을 것이고 그 배인 7%의 성장률이 이루어 졌다고 하면 30억달라에 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 1 표 공산제국과 자유제국의 GNP

(단위 : 억달러)

공산제국	1967	1968	자유제국	1967	1968
소련	3,580	4,300	미국	8,070	8,610
중공	750	780	일본	1,160	1,420
포แลนด์	340	380	서독	1,250	1,320
동독	285	300	불란서	1,040	1,150
체코	255	268	영국	1,100	1,030
루마니아	169	181	이태리	650	720
헝가리	121	127	캐나다	575	626
유고	92	96	인도	410	405
큐바	33	33	호주	258	268
북한	27	28	한국	46	52

출처 : 세계주보 . 1968년 10월분과 1969년 10월분 . 각호

둘째로 북괴가 공표한 북괴개념의 국민소득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CIA당국이 발행한 「북한의 국민소득추계」(1965년 12월 10일자)에 의하면 제 2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7년 가격으로

1963년에 국민소득이 45억 2,200 만원이며 1964년에는 49억 7,420 만원으로 되어 있다.

제 2 표 북한 의 국민 소득

(단위 : 백만원)

연 도	북괴개념에의한 소 득 (I)	통상개념에의한 소 득 (II)	(II) 불불로 환산한 것	1인당국민 소득(불)
1953	668.0	601.2	(역불)
1956	1,405.3	1,264.8
1959	3,097.6	2,787.8	10.3	104.4
1960	3,287.6	2,958.8	11.5	106.7
1961	3,720.0	3,348.0	13.0	117.4
1962	4,132.0	3,718.8	14.7	129.9
1963	4,522.0	4,069.8	15.3	136.9
1964	4,974.2	4,476.8	17.4	146.2

출처 : CIA발행 「북한의 국민소득추계」 1965.12.10

한편 북괴수상 김일성은 1967년 12월 16일 소위 「최고인민회의」 제 4기 1차회의에 4차내각의 「정부정강」을 밝히는 서정연설에서 「1966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500원으로서 1962년에 비해 1.2배로 제고되었다」고 주장하고 또 1967년에는 580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여 처음으로 1인당국민소득을 금액으로 공표하였다.

이 김일성의 공표숫자를 액면대로 받아 드린다면 1966년의 북괴인구는 1,259만 6천으로 추정(주1)되므로 66년의 북괴국민소득(그들의 개념으로)은 62억 9,800만원(북괴화폐로)이 된다.

이를 미화로 환산(1\$ = 2.57원)하면 24억 5,060만불이 된다.

일본의 북한문제전문가인 강원청도씨는 이 김일성의 공표숫자인 500원을 미화 194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주2)

그런데 김일성은 1962년에 비해서 6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액면대로 받아 드린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년평균 5%씩(20% ÷ 4년이므로)증가한

주 1) 중앙정보부 : 「북괴경제통계집」 1968년 4월 2일자 . P.34.

2) 구 협회 : 「공산권제」 1969년 3월 P.62.

것으로 되며, 또, 농기간의 년평균인구 증가율 3% (주 3)를 감안하면 북괴국민소득은 농기간에 년평균 약 8%씩 증가한 것으로 된다.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로인해서 농기간의 북한경제의 성장율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제 2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2년의 국민소득 41억 3,200만원 (1957년 가격)이나 영국전락년 구소에서 추정한 67년의 북한의 GNP 27억달러를 감안하면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66년의 1인당 국민소득 500원은 지나친 과장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김일성이가 6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580원으로 될 것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과장된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단일 사실이라면 67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6% 증가하는 것으로 되고 연평균 인구증가율 3%를 감안하면 국민소득건제는 1년간에 부러 19%나 증가하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이미 보도들 통해서 다 아는 바와 같이 북괴는 7개년 계획의 실패를 시인하고 계획기간을 3개년 연장하는 한편 전인민

주 3) Macmillan & Co. St. Morticin Press New York. Statermais Ycarlaeck. 1968년판 P. 1218.

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등 전쟁준비에 광분하였다.

그러므로 67년에 그렇게 높은 고도성장이 이루어졌을 리가 없다.

7개년계획의 당초계획으로는 「공업의 총생산액은 7개년간에 약 3.2배로 되고 년평균 경제성장율은 18%에 달한다」고 하였으나 매년정월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실제 경제성장율은 전년비중 1961년~14%, 1962~20%, 1963년~8% 1964년~17%, 1965년~14%라고 보고하고 있다.

(필자주. 이 성장율은 불변가격이 아니라 경상가격이므로 실질 성장율은 훨씬 낮을 것이다) 그러나 1966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율 뿐 아니라 각종불자의 생산실적에 관해서도 일체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66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김일성이가 주장한 1966년의 1인당 국민소득 500원을 액년대로 인정하고 67,68,69 3년간의 경제성장은 영국전략연구소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3.5%씩 이루어졌다고 하면 북괴의 국민소득은 67년에 25억 3,400만불, 68년에는 26억 2,200만불, 69년에는 27억 1,400만불에 달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상기한 북괴의 국민소득을 서방측개념인

국민총생산(즉 GNP)로 재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1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복귀개념의 국민소득에 10%가산하면 GNP가 되므로 이를 가산하면 제 3표와 같이 된다.

제 3 표 복귀의 국민소득과 GNP

연 도	복귀개념의 국민소득	GNP로 재평가한것
1966년	24.50 백만불	26.95 백만불
1967년	25.34 "	27.87 "
1968년	26.22 "	28.84 "
1969년	27.14 "	29.85 "

여기서 우리는 제 3표의 복귀 GNP가 영국전략연구소나 필자가 추정한 것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책로 약간 묶은 것이기는 하나 복귀 GNP를 추계한 자료로서 미국의 경제학자 로젠슈타인·로단(Rosenstein Rodan)의 것을 들 수 있다.

로젠슈타인·로단은 1961년의 선진국 후진국 및 사회주의 Bloc 제국의 1인당 GNP를 추계하여 다음 제 4표와 같이 국제비교를

하고 있다.

로젠슈타인·로단의 "화폐" 국민총생산이라는 것은 공정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요소비용"으로서의 각국 GNP이며, "실질" 국민총생산이라는 것은 미국의 물가수준과 기타제국의 물가수준과의 차에 따라 수정한 각국의 GNP를 미화로 표시한 구매력인 것이다.

제 4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련의 1인당 "화폐" 국민총생산의 대비율은 29.3%, 1인당 "실질" 국민총생산의 대비율은 35.3%로 평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로젠슈타인·로단이 사회주의 Bloc 제국의 GNP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후진국 중에서도 아시아제국과 사회주의 Bloc의 중공·북괴 및 월맹의 "화폐" GNP와 "실질" GNP 사이에 큰 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소득을 세산함에 있어서 선진국의 기준을 후진국에 그대로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후진국의 소득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왜냐 하면 후진국 경제일수록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서비스」의 비중이 크며 또 대가가 지불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기 때문이다.

제 4 표 1인당 GNP의 국제비교(1961년)

		"화폐" GNP	"실질" GNP
선진국	서구	1,091 (미불)	1,472 (미불)
	대양주	1,105	1,513
	미국	2,790	2,790
	캐나다	2,048	2,048
	일본	383	613
	남아연방	427	598
공산권	소련	818	986
	중국	550	825
	북괴	105	211
	중공	83	167
	월맹	105	199
후진국	아프리카	100	164
	라틴아메리카	311	425
	아세아	84	154
	구라파	313	501
	중근동	187	257

출처 : P.N.Rosenstein-Rodarn, International Aid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1961. P.118.

그렇기 때문에 로젠슈타인·로단은 제 4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공과 북괴의 "실질" GNP를 "화폐" GNP 보다도 2배나 높이 평가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후진제국은 약 85% 가량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로젠슈타인·로단이 아시아제국(공산권이나 자유제국이나 다)의 "실질" GNP를 타지역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것 같다.

아시아제국의 "실질" GNP로 남아연방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근동 및 구라파의 후진국과 같이 약 50% 가량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 로젠슈타인·로단이 추정한 북괴의 1인당 화폐 GNP와 "실질" GNP를 평균하면 158 달러가 된다. 1961년 당시의 북괴인구는 약 1,100 만인(주4)으로 추정되므로 북괴의 61년 GNP는 17억 3,800 만달러 였다고 할 수 있다. 그후 북한의 인구는 제 5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평균 약 3%씩 증가(주5) 하였으므로 김일성이가 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1인당 국민소득이 년평균 5%씩 증가하였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GNP는 년평균 8%씩 증가하여 1967년에는 27억 5,700 만달러에 달하게 된다.

주 4) 중앙정보부 : 「북괴경제통계집」 P.34.

5) 중앙정보부 : 상계서 P.37.

이것은 영국전략연구소가 추정한 27억달러를 약간 상회한다.
 그런데 동기간에 북괴의 경제성장이 년평균 8원씩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실제로 있어서 27억달러를 상회하지는 못하였
 을 것이다.

제 5 표 북괴인구의 자연증가율 추이

연 도	출생자수	사망자수	자연증가율	출 처
1944	3.13 %	2.08 %	1.05 %	조 선 중 앙
1949	4.12 %	1.87 %	2.25 %	년감 61년
1953	2.51 %	1.81 %	0.7 %	〃
1956	3.10 %	1.76 %	1.34 %	〃
1959	3.93 %	1.20 %	2.73 %	〃
1960	3.85 %	1.05 %	2.8 %	〃
1961	3.67 %	1.15 %	2.52 %	「중년」 63년
1962	4.11 %	1.08 %	3.03 %	〃
1963	4.27 %	1.28 %	2.99 %	「중년」 64년
1965	4.36 %	0.98 %	3.37 %	L 생 수 천

출처 : 북괴경제통계집 . 68.4.2.P.37.

북괴 GNP의 증가추이 (8%성장사)

년 도	GNP (백만불)	년 도	GNP (백만불)
1961	1,738	1965	2,364
1962	1,877	1966	2,553
1963	2,027	1967	2,757
1964	2,189	1968	2,800

그러므로 69년의 북괴 GNP는 필자가 추정하는 바와 같이 29억내지 30억달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결론으로 우리나라의 CIA당국이 추정한 북괴 GNP를 보면 제 6 표와 같다.

제 6 표 GIA 추정의 복귀 GNP

년 도	복귀와 표시 GNP	미불와 표시 GNP
1961	438,000 만원	17 억 430 만분
1962	466,659 "	18 " 1,579 "
1963	500,000 "	19 " 4,740 "
1964	537,000 "	20 " 5,058 "
1965	577,000 "	22 " 4,010 "
1966	637,000 "	24 " 5,130 "
1967	659,000 "	25 " 6,400 "
1968	691,950 "	26 " 9,220 "
1969

한편 69년말 현재의 북한인구에 관해서는 앞에서 1,370 만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을 할면 다음과 같다.

첫째 : 북괴가 발행하는 「조선중앙년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명)

46년말 - 9,257	59.12.1 - 10,392
49년말 - 9,622	60년말 - 10,789
53.12.1 - 8,491	63.10.1 - 11,568
56. 9.1 - 9,359	65년 - 12,408

출처 : 북괴경제통계집 1968.4.2. P.33.

둘째 : UN관계자료에 의하면 북괴인구와 그 증가추세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북한인구와 그 증가추세

년 도	총인구수	증 가	년 도	총인구수	증 가
1957	960 만인		1962	1,120 만인	(30 만)
1958	990 ♢	(30 만)	1963	1,150 ♢	(♢)
1959	1,025 ♢	(35 ♢)	1964	1,180 ♢	(♢)
1960	1,060 ♢	(35 ♢)	1965	1,210 ♢	(♢)
1961	1,090 ♢	(30 ♢)	1966	1,240 ♢	(♢)

출처 : 북괴경제통계집, 1968.4.2. P.33.

위 표에 의하면 59년과 60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30만씩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69년말에 1,330만에 달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영국전략연구소는 67년 1,300만, 68년에는 1,330만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재 :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였다고 할 수 있는 CIA당국의 잠정 북괴인구추계(1960~1970)를 보면 다음 제 7 표와 같다.

제 7 표 잠정 북괴인구추계 (중위)

년 도	인 구	년 도	인 구
1960	10,716,841	1965	12,276,551
1961	11,028,811	1966	12,595,871
1962	11,341,786	1967	12,933,292
1963	11,652,759	1968	13,270,496
1964	11,964,730	1969	13,607,843

CIA추계는 연말인구가 아니라 년사인구이므로 영국전략연구소의 추정치보다는 약간 적으나 연말로 계산하면 오히려 약간 상회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북괴가 발표한 1963년 10월 1일 현재의 인구 1,156 만이 해마다 3%씩 증가한 것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북괴인구의 추이

1963년 10월 1일 - 1,156 만	1967년 - 1,302 만
1964년 < - 1,191 <	1968년 - 1,341 <
1965년 < - 1,227 <	1969년 - 1,381 <
1966년 < - 1,264 <	1970년 - 1,422 <

출처 : 필자의 추계

그러므로 결국 69년의 남북한 GNP와 1인당 GNP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GNP 1인당 GNP의 비교

	단 위	한 국	북 괴	대 북괴 비
G N P	억 달러	61	29 ~ 30	약 2 배
인 구	만 인	3,114	1,370	2.24 배
1인당 GNP	미 달러	195	212 ~ 219	92 ~ 90 %

제 3 장 생산과 소비

1970년대말에 이르기까지의 남북한의 국민총생산을 예측하려면 먼저 앞으로의 경제성장추세를 예측치 않으면 안된다. 또 그들 위해서는 현시점에 이르기까지의 경제성장과정을 분석하여 성장요인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경제성장을 결정할 주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북괴는 6.25 동란 이후 경제부흥3개년계획과 5개년계획 및 완충기를 거쳐서 1961년부터 7개년계획을 실시하여 오다가 다시 이를 3개년간 연기하여 실시하고 있다.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하자 북괴는 경제의 부흥발전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6차총회에서 토의 결정하였다.

즉 제 1단계는 반년 내지 1년간에 걸쳐서 경제의 부흥건설에 필요한 선반적인 준비작업과 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제 2단계는 경제부흥 발전 3개년계획을 작성하여 경제 각부문에서 전진수준으로 부흥하는 것이고 제 3단계는 전면적인 공업화불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는 것이었다.

전후부흥 3개년계획(1954~1956년)은 1954년 4월에 개최된 소위 「최고인민회사」 제 7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동년 1월부터 소급 실시되었는데 그 계획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은 소련, 중공 및 농구제국으로부터의 무상원조에 의하여 조달되었다.

동기간 중에 북괴가 받은 원조액은 총 5억 5,885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1) 이것은 동기간의 북괴재정수입의 약 40%에 해당한다.

북괴측 주장에 의하면 1953년을 기준(100)으로 해서 사회총생산액은 56년에 218로 성장하고 국민소득은 220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주2) 그리고 공업총생산고에 있어서는 계획목표를 부러 23%나 초과달성하여 전전수준을 상회하였다고 하나 전력, 석탄, 화학공업 등의 기초공업부분에 있어서는 전전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목불생산은 1949년 수준을 상회하였다고는 하나 식량의 자급자족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중공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단기간에 경제부흥이 비교적 급속히 이루어진 것만은 사

주 1)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총감」 45 ~ 68 P.375.

2) 통일조선신문사 「통일조선총감」 1967 ~ 1968. P.829.

실인데 이것은 소련·중공·북 동구제국의 적극적인 경제협조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3개년계획에 이어 5개년계획(1957~61년)이 실시되었다.

이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은 이미 1956년 3월에 개최된 제3차노동당대회에서 발표되었으나 그 계획안이 너무나 충공업에 치중되고 급진적이어서 인민의 물질 문화생활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짙다고 하여 소련이 받아 드리려 않고 또 노동당내의 연안파의 비판과 완강한 반대를 받았다. 따라서 농파를 숙청하기 위해 당지도부내에 혼란이 생겼기 때문에 1958년 3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1회 대표자 회의에서 비로서 동계획이 최종적으로 승인 채택되어 1957년으로 소급 실시되었다.

동계획기간 중에 북괴가 받아들인 원조액은 3억 9,94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주3) 당초 북괴가 기대하였던 것 보다는 훨씬 적은 액이다.

북괴가 당초에 기대하였던 바와 같이 원조를 받아 드리려 못하였기 때문에 (특히 소련원조의 대폭 삭감으로) 계획 수행상 차질이 나기 시작했다.

주 3)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총감」 45 ~ 68 P.375.

1957년만 해도 수입예산의 12.2%를 차지하던 소련의 원조가 58년에 4.2%, 59년에는 2.7%로 대폭 삭감되었다.

이러한 난관이 부디치자 북괴는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천리마운동」을 대항운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진간부가 직접 현지 지도를 행하는 소위 「청산리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작업반 우대제도라든가 상여금제도와 같은 불각자극 대신 정신적·도덕적으로 노동은 자극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운동으로 북관주민을 엄청나게 혹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한채 중단하였다. 물론 북괴는 1959년 6월말까지 2년 6개월만에 공업부문에서는 계획목표(생산액면)를 달성하였고 59년말에는 5개년계획을 완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북괴측 상에 의하면 1956년을 기준(목 100)으로 하여 60년에는 사회총생산액이 224로 성장하고 국민소득은 214로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주4)

중공업 부문에 지나치게 치중하였기 때문에 공업부문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농업생산의 부진과 주택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계획의

주 4) 통일조선신문사 「통일조선년감」 1967 ~ 1968. P.829.

보수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고 미비사항을 조정키 위하여 1960년을 특히 완충기로 삼게 되었다.

5개년 계획기간중에 복귀가 달성한 것은 농업의 집약화와 중공업의 사업금지이다. 이로써 복귀는 사회주의경제체제를 확립한 셈이다.

복귀는 완충기 경제정책의 목표로

- ① 농업의 기저화
- ② 주민생활의 향상
- ③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설비이용율의 향상에 의한 생산증대
- ④ 지방분권화를 위한 진부 및 기술자의 양성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5개년계획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복귀는, 약한 부분을 강화하여 현재까지 건설하여 놓은 골격에 살을 부쳐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은 5개년계획 자체의 보수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뚝이 중단하고 결함을 시정 조정하려는 것이었다.

1961년 9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 4차 당대회서 「국민경제발전 7개년계획」이 채택되었다.

동대회에서 북괴수상 김일성은 계획의 발전에 언급하여 「이 계획이 수행되면 북한은 자립적 공업과 대규모의 기계화된 농업을 갖는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변할 것이다.

주요공업 기초불자의 인구 1인당 생산고는 어떤 부분에서는 일본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이 계획이 끝나는 67년에는 전반적으로 일본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게 될 것이다」(주5)라고 자신에 넘친 전망을 하였으나 결국 7개년계획은 실패하여 66년 10월의 북괴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동계획을 3개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그 실패의 주요원인은 5개년계획의 후반기에 있어서와 같이 당초 예정되어 왔던 외자(주로 소련의 차관)도입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부족하였든 북괴는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거액의 외국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북괴는 7개년계획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이주연부 수상겸 부역상을 중공 및 소련에 파견하여 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6)

주 5) 구 협회발행 「월간공산권문제」제 13권제 3호 1963.3. P.53.

6)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종합」 45 ~ 68 P.374.

중공과의 차관협정 :

1960년 10월 13일 체결, 기간은 1961년부터 64년, 총액 4억 2,000만 루블. 중공은 북괴에

- ① 다이야공장, 무선통신기계공장, 일용필수품 생산공장의 건설에 원조한다.
- ② 방직설비 및 무선설비를 제공한다.

소련과의 경제기술협정 :

1960년 12월 24일 체결 소련은 북괴에 ① 광채제철소의 착장을 원조한다. (생산능력은 강철 200만톤, 압연장재 230만톤)

② 북창과수발전소(능력 60만kw)와 평양화력발전소(능력 40만kw)의 건설을 원조한다. ③ 연산 200만톤 능력의 원유정제공장은 건설하고 원유를 제공한다.

④ 영화촬영소, 아마직물 및 방직생산공업의 건설 및 기술원조를 제공한다. 또 북괴는 소련의 원조의 대하여 무역(대소수출)을 통해서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1961년 10월의 소련공산당 제 22차당 대회들 계기로 하여 북괴의 친중공, 반소비난이 표면화하였기 때문에 소련의 대북괴 원조는 정지되었다.

한편 대약진정책의 사후처리도 고심하고 있는 (그 당시) 중공으로 부터는 실질적인 원조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괴는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 4기 제 5차 총회를 개최하여 자력에 의한 「경제건설과 국토건설」의 병진책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대승산운동인 「천리마운동」을 보다더 강력하게 전국적으로 전개하였으나 경제성장률은 62년을 피크로 하여 점차 분화되었다.

남측의 계획으로는 「공업의 총생산액은 7개년만에 약 3.2배로 되고, 년평균 경제성장률은 16%에 달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매년 1월에 발표하는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발표에 의하면 실제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비중 1961년 - 14%, 1962년 - 20%, 1963년 - 8%, 1964년 - 17%, 1965년 - 14%라고 보고되어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실적성장률이 아니라 명목성장률일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 하면 중공이나 소련의 원조가 중단된 상태에서 17.14%의 성장이 이루어졌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단, 경상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면 사회총생산액이나 국민소득이 그와 같이 성장하였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 품목별생산실적에 관한 북괴의 소위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발표를 보면 1963년까지는 비교적 상세히 보고하고 있으나

1964년의 생산고에 관해서는 전년비증산율 본 발전량, 석탄등 9개 품목에 관해서만 발표하고 방적부(3), 가죽(5), 축산물(3)에 관해서는 전년비증감비율만을 발표하고 있다. 1965년에는 18개 품목에 관해서 전년비 증감비율만을 발표하고 1966년 이후에는 생산고에 관해서 일체 발표가 없고 있다.

1965년까지 북괴가 발표한 주요공업품의 생산고를 참고삼아 정리하면 다음 제 1표와 같다.

이러한 7개년계획의 추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괴는 소련의 합력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65년 2월 이후의 북소정교는 마침내 66년 5월 20일 모스크바에서 소련과 북괴간에 경제기술협력협정이 조인되어 1961년 이래 정지되어 있던 원조격 재개되게 되었다. 이 협정은 이미 1960년 12월에 체결되어 있었던 것은 구체화 된것에 지나치 않는다.

소련으로부터의 원조약속을 받은 북괴는 1966년 10월의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7개년계획을 3개년간 연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북괴제 1부수상 김일은 당대표자회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있어서의 당면한 과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보고하는 가운데 7

제 1 표 주 요

인도 품 목	1960	1961	1962
발전량	913,000 만 (KWH)	86,100 만증 1,000,000 만	135,500 만증 1,135,500 만
석탄	1,062 만 (t)	138 만증 1,200 만	120 만증 1,320 만
철광석	310.8 만 (t)	354 만 "	334 만 "
선입 철	85.3 만 (t)	7 만 7,000 증 93 만	28 만 3,000 증 121 만 3,000
강 철	64.1 만 (t)	15 만 9,000 증 80 만	25 만증 105 만
강 재	47.4 만 (t)	54 만 "	16 만 1,000 증 70 만 1,000
직 물	18,966 만 (m)	44 만증 19,010 만	6,600 만증 25,610 만

주 1) 각란의 상급숫자는 북괴당국의 발표, 하단은 추정숫자를 표시
 2) 66년의 실수는 김일제 1부수상이 동년 10월의 당대표자회에
 출처: 구 협회 「월간공산권분제」 제 13 권제 3 호 1969년 3월호

공 업 품 생 산 고

(1966 년 현재)

1963	1964	1965	1966	1967 (목표)
32,100 만증 1,167,600 만	62,000 만증 1,229,600 만	107 % 증 1,316,272 만	125 억	170 억
84 만증 1,404 만	미 발 표 가정 1,404 만	124 % 증 1,741 만	2,000 만	2,300 만
75 만증 409 만	미 발 표 가정 409 만	124 % 증 507 만	미 발 표	720 만
5 만 4,000 감 115 만 9,000	18 만증 133 만 9,000	미 발 표	150 만	220 만
2 만 8,000 감 102 만 2,000	11 만증 113 만 2,000	109 % 증 124 만 1,700		220 만
12 만 9,000 증 83 만	11 만증 94 만	114 % 증 107 만 1,600	미 발 표	170 만
2,900 만감 22,710 만	40 % 증 31,780 만	100 % 31,780 만	미 발 표	5 억

하는 것임.

서 밝힌 것이다.

P. 55.

개년계획의 실패를 시인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현대수정주의 (소련을 뜻함)의 나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7개년계획의 수행에 일련의 난관과 장애를 가져왔다. (중략) 우리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경제발전을 어느 정도 조정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라고

또 김일은 3개년 연장의 이유로 「국방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기한을 연기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군사력 강화가 북한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이나 7개년계획의 성패는 소련의 대북외 경제협력방식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전후부흥 3개년 계획과 5개년계획 완공기 및 7개년계획을 개관하였거니와 근 20년간에 걸친 북한의 경제성장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련, 중공 및 봉구제국의 무상원조와 차관 및 기술원조에 의하여 경제건설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북괴가 주장하는 사회총생산액 및 국민소득의 성장추세를 보면 다음 제 2 표, 제 3 표와 같다. 여기서 우리는 휴전 이후 1960년, 61년까지는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그후 둔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기간의 예산수입국에 반영된 원조액(제 4 표)을 보면 외국의 원조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휴전후 공산국가들이 자체계획에 의하여(북괴예산수입과 관계없이) 북한국의 공장기업소를 복구 신설한 후 북괴측에 이양한 원조액은 5억 1,759 만불에 상당하며, 여기에 중공이 60년 10월 13일 협정에 의하여 61~64년간에 북괴에 제공한 원조(차관) 1억 500 만불을 합하면 6억 2,459 만불에 달한다.

제 2 표 사회총생산액의 성장(%)

년 분	1964	1949	1953	1956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사	100	219	163	355	797	941	10 배	11 배	12 배	12.9 배
회		100	75	162	364	429	475	502	545	-
총			100	217	488	576	637	673	732	786
생				100	224	265	293	309	336	-
산					100	118	131	138	150	161
액									100	108

제 3 표 국민소득의 성장

연 도	성 장 율 (%)				
1946	100				
1949	209	100			
1953	145	70	100		
1956	319	153	220	100	
1958	594				
1959	636	305	438	199	
1960	683	328	470	214	100
1961	810	389	558	254	119
1962	869	416	598	272	127
1963	928	445	639	291	136
1964	10 배	479	689	313	146
1965	1,070			336	
1966					

제 4 표 예산수입면에 반영된 원조액

연 도	부 과 화 (원)	미 분	총세입에 대한비율(%)
53	1억 0,071만 8,880	5,275만 2,191	18.4
54	2억 6,322만 5,760	1억 3,626만 1,191	33.6
55	2억 1,426만 0,580	1억 1,088만 1,471	21.0
56	1억 3,200만 0,000	6,831만 0,000	14.0
57	1억 4,004만 0,000	5,449만 0,272	14.4
58	6,360만 3,000	2,474만 8,290	4.2
59	6,300만 0,000	2,451만 3,619	2.7
60	5,000만 0,000	1,945만 5,252	2.6
61	0	0	제외은 1.9% 있으나 결산에서는 사회주의 경리수입 97.9%, 주민세금 2.1%로 되어 있음.
합 계		4억 9,341만 7,846	

북괴는 금년 10월에 노동당제 5차당대회를 개최하고 7개년계획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보고하고 신 5개년계획(71~75년)을 채택할 것이라고 한다. (주7)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북괴가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 재원을 조달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며 년평균경제성장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1970년대에 북한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없는 애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성장율을 예측키로 한다.

첫째, 제일 큰 애로는 노동력의 부족이다. 북한인구의 연령별, 성별구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북괴가 발행하는 「조선중앙년감」에 의하면 출생률과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제 5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3년에는 2.5% (출생률)와 0.7% (자연증가율)로 되어 있다. 이것은 6.25 동란 중에 많은 청·장년이 동원되어 사망하거나 월남하여 출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현재의 인구증가율은 년평균 3%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1951~56년간의 년평균출생률과 자연증가율은 53년과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주7) 공보통신사 「세계년감」 1970. P.220.

51 ~ 56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오늘날 19 ~ 24세이므로 앞으로 5 ~ 6년간의 노동력공급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둘째,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다.

북자는 중·소전쟁의 격화로 인해서 북괴가 중·소 양쪽으로 부터 보다 수월하게 자금의 원조와 기술원조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10년간에 걸쳐서 북괴가 천소·천중공정책을 번가랴 써왔기 때문에 소련이나 중공이나 다 대북외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전 개하지는 않은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자기진영에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적으로는 압박을 가할지도 모른다. 또 중공이나 소련의 대내외사정이 북괴를 적극지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최근의 북괴의 대중공집안정책은 소련을 자극하여 북괴에 대한 소련의 경제협력방식에 변동을 가져 올지도 모른다.

셋째, 군사력강화에 따르는 자원과 노동력의 낭비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이라는 명진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북괴는 자력으로 군장비를 현대화하고 전인민을 무장하고 전국토를 요새화 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자원과 노동력을 투입할 것이다.

제 5 표 인구의 자연증가율 추이

년 도	출생자수	사망자수	자연증가율	참 처
1944	31.3 %	20.8 %	10.5 %	「중년」 61
1949	41.2 %	18.7 %	22.5 %	◇
1953	25.1 %	18.1 %	7.0 %	◇
1956	31.0 %	17.6 %	13.4 %	◇
1959	39.3 %	12.0 %	27.3 %	◇
1961	38.5 %	10.5 %	28.0 %	◇
1962	36.7 %	11.5 %	25.2 %	「중년」 63
1963	41.1 %	10.8 %	30.2 %	◇
1964	42.7 %	12.8 %	29.9 %	「중년」 64
1965	43.6 %	9.8 %	33.7 %	▷ 수침

북괴가 부력에 의한 적화통일방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군사력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을 침해하는 큰 애로가 아닐 수 없다.

네제 경제각부문간의 불균형이다. 일관된 중공업우선 정책으로 인해서 금속공업등의 중공업시설은 어느 정도 발달하였으나 실제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재생산부분 즉 경공업부분은 극도로 낙후한 상태에 있어 공업부문간의 불균형이 노정되고 있으며 농업생산의 부진은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크게 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개발방식은 중공업부문에서는 중요하나 경공업부분과 농업부분에서는 좀처럼 그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경공업부분은 중공업부분과 달라서 이윤방식을 도입하여 자기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지않는 한 발전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북괴와 같은 체제에서는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애로로 인해서 북한경제는 70년대에 고도성장을 이룩하지는 못할 것이다. 앞으로의 성장률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하만·칸(Herman Kahn)이 예상하고 있는 1965~2000년의 아세아제국의 년평균성장률(주8) 5.9%선을 결코 상회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리약난제에 들어선 한국경제는 60년대에 개발도상국중 보기도분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

주 8) Herman Kahn and Anthony J. Wiener:

[The Year 2000] 일익판, P.223.

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 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1962 ~ 66년) 중의 년평균 GNP실질성장율은 제 6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3%를 이룩하였으며 제 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1967년 8.9% 68년 13.3%, 69년 15.5%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또 금년에는 11%(목표)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6 표 한국의 GNP 성장율

년 도	성 장 율 (%)	년 도	성 장 율 (%)
1953	-	1962	3.5
1954	6.0	1963	9.1
1955	6.1	1964	8.3
1956	1.2	1965	7.4
1957	8.8	1966	13.4
1958	5.5	1967	8.9
1959	4.4	1968	13.3
1960	2.3	1969	15.5
1961	4.2	1970	11(목표)

이러한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요인으로는 정치적 안정, 외자 및 기술의 도입, 월남수요로 인한 외자수입의 증대, 젊은관리와 기술자 및 근면하고 값싼 노동자의 존재 및 정부의 강력한 계획추진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72년부터 시작되는 제 3차 5개년계획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을 8.5%로 삼고 1979년에는 국민총생산이 69년불변시장가격으로 4조 7,608억원 즉 177억달러에 달하고 인구는 3,667만인에 달하여 1인당 GMP는 129,814 (482.9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적안정, 계속적인 수출의 성장,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과 신용확보, 높은 교육수준의 풍부한 인적자원, 국민의 개발의욕 및 정부의 강력한 개발정책등을 감안할 때 1970년대에 있어서도 국내외정세에 큰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연평균 8.5%이상)을 이룩할 것이다.

제 4 장 1970년대말 까지의 생산량의 비교와 우열

국민총생산의 성장을 중심으로하는 경제경쟁은 출발점에 있어서의 양측의 국민총생산과 그후의 성장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헌시점(1969년)에 있어서의 남북한의 국민총생산은 이미 제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은 미화로 61억달러, 북한은 29억 내지 30억달러임으로 한국의 대북괴비율은 2.1배라고 할 수 있다. 또 인구는 한국이 3,114 만이고, 북한은 1,370 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구의 대북괴비율은 2.24 배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GNP에 있어서는 한국이 195 달러이고 북한은 212 달러 내지 219 달러(필자의 추정)가 되어 한국의 대북괴비율은 92 ~ 90%이다.

한편 성장율에 있어서는 비교적 급속한 경제구동을 이룩하였으나 60년대에 들어서서는 소련의 경제 및 기술원조의 단절 또는 삭감으로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하였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60년대에 들어서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70년대에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북한경제는 5% 내지

7%의 성장을 이룩하고 한국경제는 8% 내지 10%의 고도성장을 이룩할 것이다.

한편 인구증가율이 있어서는 한국이 해마다 0.1%씩 저하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3%선을 상회할 것이다.

먼저 1970년부터 79년대 오르기까지의 한국의 GNP와 인구나 1인당 GNP를 추정키로 한다.

정부계획대로 년평균 8.5%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GNP는 제 1표와 같이 되고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족계획대로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 총인구와 1인당 GNP는 제 2표와 같이 되어 GNP는 74년에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79년에는 177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또 1인당 GNP는 1974년에 300 달러를 상회하고 1977년에 400 달러 1979년에 480 달러에 달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1969년 GNP를 29억 5,000 만 달러(원자가 추정된 29억과 30억을 평균한 것)로 보고 70년대의 ① 전반기는 4%, 후반기는 6%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② 7%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6%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④ 7%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⑤ 8%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해서 GNP를 추측하면 다음 제 3표와 같이 된다.

제 1 표 한국의 GNP의 추정

	69년불변가격으로 (단위: 억원)	정상시장 가격으로 (단위: 억원)	미화로 환산하여 (단위: 억원)
1970	22,531	24,784	6,892
1971	24,559	29,446	7,678
1972	26,647	34,827	8,515
1973	28,912	41,199	9,445
1974	31,369	48,716	10,472
1975	34,035	57,622	11,617
1976	36,932	68,139	12,881
1977	40,070	80,540	14,298
1978	43,085	95,198	15,870
1979	47,608	112,524	17,711

출처: 경제기획원 기획국

앞에서 70년대의 북한의 GNP는 5% 내지 7%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중간인 6%내외의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생각한다. (전술한 바와같이 하만·칸은 아세아제국이 앞으로 33년간에 걸쳐 년평균 5.9%의 성장을 이룩

제 2 표 한국의 인구 및 1인당 GNP의 추정

연도	인구증가율 (%)	인구 (단위 : 만인)	1인당 GNP
1969	2.2	3,113.9	195
1970	2.1	3,179.3	216.8
1971	2.0	3,242.8	236.7
1972	1.9	3,304.4	256.0
1973	1.8	3,363.9	281.0
1974	1.7	3,421.2	306.2
1975	1.6	3,475.9	334.0
1976	1.5	3,528.0	365.0
1977	1.4	3,577.4	400.0
1978	1.3	3,623.9	438
1979	1.2	3,667.3	480

출처 : 인구증가율과 인구는 보사부

1인당 GNP는 필자의 추정

제 3 표 북한 GNP의 추정

(단위 : 백만불)

	전반기 4% 후반기 6% 의 경우	5%의 경우	6%의 경우	7%의 경우	8%의 경우
1970	3,068	3,097	3,127	3,149	3,186
1971	3,191	3,252	3,315	3,370	3,441
1972	3,318	3,415	3,514	3,605	3,716
1973	3,451	3,586	3,725	3,858	4,013
1974	3,589	3,761	3,948	4,097	4,333
1975	3,733	3,949	4,185	4,385	4,780
1976	3,956	4,147	4,436	4,692	5,162
1977	4,194	4,354	4,702	5,020	5,575
1978	4,446	4,571	4,984	5,372	6,020
1979	4,712	4,800	5,283	5,747	6,500
1980	5,000	5,040	5,600	6,149	7,020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이 6%의 성장을 이룩하면 북한의 GNP는 74년에 근 40억 달러에 달하게 되고 79년에는 52억 8,300만 달러 80년에는 56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한편 인구는 3%씩 증가하여 제 4 표

제 4 표 북한의 인가와 1인당 GNP의 추정

년도	년평균 6% 성장 시의 GNP	년평균 3% 증가 시의 인구	1인당 GNP
1970	3,127 (백만불)	1,411.1 만	211.6 달러
1971	3,315	1,453.4	228.4
1972	3,514	1,497.0	234.6
1973	3,725	1,542.0	241.6
1974	3,948	1,588.0	248.7
1975	4,185	1,635.7	258.7
1976	4,436	1,684.7	263.3
1977	4,702	1,735.3	271.0
1978	4,984	1,787.0	278.9
1979	5,263	1,840.6	287.1
1980	5,600	1,900.0	295.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75년에는 1,635만, 80년에는 1,900만에 달하고 1인당 GNP는 74년에 248.7불, 79년에 287불이 될 것이다.

이와같이 1인당 GNP가 별로 증가하지 못하는 것은 인구증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 남북한의 GNP, 인구 및 1인당 GNP를 대비하면 제 5공약과 같이 된다. 즉 우리의 제 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76년에는 GNP가 약 3배로 되고 인구는 약 2.1배로 되고 1인당 GNP는 약 100불 많아진다. (북한보다도)

그리고 1979년에는 가서는 GNP가 177억 대 53억, 인구는 3,667만 대 1,840만, 1인당 GNP는 480불 대 287불 내지 312불이 될 것이다.

제 5 표 남북한의 GNP인구 및 1인당 GNP의 비교

	G N P		인 구		1인당 GNP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1969	61.00	29.50	3,113.9 만	1,370.0	195 달러	215 달러
1970	68.92	31.27	3,179.3	1,411.1	216.8	221.6
1971	76.78	33.15	3,242.8	1,453.4	236.7	228.4
1972	85.15	35.14	3,304.4	1,497.0	258.0	234.6
1973	94.45	37.25	3,363.9	1,541.9	281.0	241.6
1974	104.72	39.48	3,421.2	1,588.1	306.2	246.7
1975	116.17	41.85	3,475.9	1,635.7	334.0	256.0
1976	128.81	44.36	3,528.0	1,684.7	365.0	263.3
1977	142.98	47.02	3,577.4	1,735.3	400.0	271.0
1978	158.70	49.84	3,623.9	1,787.0	438.0	278.9
1979	177.11	52.83	3,667.3	1,840.6	480.0	287.1

주: ※표를 한 북한의 1인당 GNP는 북한경제가 년평균 7%의 성장이 이루어졌을 경우다.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